

“웃돈 안 주면 안 가”...시외 택시요금 ‘부르는 게 값’

미터기로 2만8450원 광주~장성 상무대 최대 5만5000원까지 요구 일부 10여년 전 할증요금표 내밀고 현혹...현금 아니면 승차 거부도 과다요금 민원 접수...광주시 “요금표 만든 적 없어 부당요금 신고대상”

GPS와 ‘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 요금제가 보편화된 지금도 광주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시외 택시를 타려면 수만원의 웃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각각의 ‘광주시 시외요금표’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승정역 택시기사들에 대한 현금 및 과다요금 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 15일 광주 승정역에서 장성 상무대 육군군사학교로 이동하려던 한 군인이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결제를 강요받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3만원)보다 50% 비싼 4만 5000원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택시 총 4대의 승차를 시도했으나 모두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태워 주겠다”며 승차 거부를 했고, 입교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민원인 주장이다.

16일 광주 승정역 일대에서 택시 10여 대를 잡아 민원인과 똑같이 장성 상무대로 가는 요금(30여㎞ 거리)을 묻자 기름값, 회차비 등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 예약 콜택시 기사들은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제시하는 등 요금이 제각각이었다. 승정역 내 현장 승차 요금은 2만 5000원~4만 4000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심지어 기름값 명목으로 5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콜택시를 부르자, 앱에는 GPS 신호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2만 7000~2만 9000원 사이의 요금이 제시됐다.

앱으로 2만 6900원 요금에 택시를 잡아 직접 탑승해 보니, 30여분 동안 운행한 끝에 장성 상무대

입구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에 2만 8450원의 요금이 찍혔다. 택시 기사들이 제시한 가격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었다.

일부 기사들은 ‘광주택시 시외요금표’를 내밀며 두 배에 가까운 웃돈이 정당한 요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요금표에는 광주에서 장성 상무대까지 이동하는 요금이 4만 5000원부터 5만 5000원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해당 요금표는 10여 년 전 개인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협의한 요금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 사업자, 기사식당 등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9년 개정된 택시 운임 규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시외의 할증률을 주행요금의 35%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훈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로 요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광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외의 운임 요금을 공식으로 표로 정리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광주시에서는 택시 요금표를 만든 적도 없으며 그런 표가 존재한다면 부당 요금이자 교통불편 신고 대상이다”며 “광주시는 구간 정액 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시외로 한 번 나가려면 여러 대의 택시를 잡고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외전 곳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 불가피하게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가며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영복(80)씨는 “면회 오는 가족·지인들이 주



16일 광주승정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승차를 대기하고 있다.

말에는 5만 원까지 주고 타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광주에서 상무대로 가는 것보다 상무대에서 나올 때 기사들이 요금을 더 높게 부르지만 군인 신분 때문인지 흥정조차 하기 어려워 하더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앱으로 계산한 요금만으로는 시외에서 광주로 돌아올 때의 손해를 메울 수 없다며 웃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시외에서 빈차로 돌아올 손해를 감안해 할증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미터기 끄고 운행하는 택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시외 요금 안내표에 따라 값을 올려 받던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택시 기사는 “장성이나 담양은 길이 안 좋고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안 나와 효율이 떨어지는 곳으로 꼽힌다. 외국인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사가 부르는 값에 탑승하면 고객과 기사의 협정요금인 것이다”며 “되려 장성 택시를 불렀을 때 상무대까지 오는 시간도 걸리고 요금도 더 비싸 협정요금 내고 광주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기사들은 손님들과 요금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시외의 택시 요금을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놔다.

한 택시기사는 “관행적으로 회차 요금 일부를 붙이는데, 이 때문에 부당 요금을 받는다면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기사들이 지자체에 불려다니는 일도 잦다”며 “카카오택시 등 거리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앱이 나오면서 손님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시외의 요금을 정해 주면 분쟁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여수 남해화학 압수수색

여수국가산업단 내 비료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16일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 내 남해화학 공장장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공장장, 안전팀장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곳에서는 40대 작업자 A씨가 비료 원료 창고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직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규칙을 준수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감사원, 곡성군 10여명 조치 요구 유근기 전 군수는 수사 의뢰

감사원이 곡성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유근기 전 곡성 군수를 수사 의뢰하고 10여 명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곡성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 과거 군청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대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유 전 군수를 수사 의뢰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곡성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5명, 경징계 4명, 주의 5명, 수사의뢰 1명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곡성군에서는 여성 직원이 남성 공무원직 직원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초 감사에 착수 최근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군수 임기를 마친 터라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성 비위 직원에 대해 해임,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부서장 2명에 대해서는 강등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음주운전 적발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광주일보 9월 8일 6면 ‘이게 조합장 갖발?’ 기사의 내용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으로 확인돼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같은 기사의 “조합원에게 사과금 등 3만 6000원 상당의 금품 기부행위를 해...”는 사과금이 아닌 다른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에게 금품 기부행위를 해...”로 바로잡습니다. 더욱 충실한 편집으로 보다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준비 ‘신안 라일락축제’ 올해 개최 포기 왜?

지난해 꽃 모종 10만 개 심었는데 20~30% 말라죽어...올 가을 다시 심어 내년 개최

신안군이 올 가을 지도읍 일대를 라일락 꽃밭으로 만들어 ‘라일락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수억원을 들여 심은 꽃이 대규모로 말라 죽으면서 축제 개최를 포기했다.

신안군은 이날 중순 신안군 지도읍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회 신안 라일락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예산 40억원을 들여 지도읍 광정리 일대 총 10만㎡(3만여평) 부지에 라

일락정원을 조성했다. 썸머라일락, 벚꽃마편초, 만나무 등을 심고 지난해 7월 1차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 앞서 지난해 6월 예산 2억 5000여만 원을 들여 라일락 10만여 그루를 심었으나, 이 중 20~30%인 2~3만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내 숲길에 7만여그루, 정원에 3만여그루를 심었으나, 이 중 숲길에서는 어림잡아 15%, 정원에서는 50% 이상의 꽃이 고사한 것이다.

군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라일락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립한 ‘정원수협동조합’과 협업체 계약제배 형태로 2023년부터 1년간 썸머라일락(벚꽃래)을 양묘한 뒤 정원으로 옮겨 심었는데, 지난해 8~9월부터 갑자기 고사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지속되자 습기에 약한 라일락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이 군 분석이다. 주민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너무 짧게 해 꽃이 고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올해 초부터 새로 키운 라일락을 옮겨 심으려고 했으나, 올해도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가 이어져 축제일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가을 중으로 고사한 라일락을 다시 심고 내년 가을에 축제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토양을 개량하고 고사한 지역에는 흙을 추가하고 보완해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